

2014년 관세청 업무보고

2014. 2. 20



관세청
KOREA CUSTOMS SERVICE

순서

I. 기관 현황	1
II. 2013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	4
III. 2014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	9
IV.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	12
1.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 / 13	
2.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/ 15	
3.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 / 17	
4. 불법·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/ 19	
5.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/ 21	
6.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 / 23	
7.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 / 25	
V. 분기별 추진계획	27



I. 기 관 현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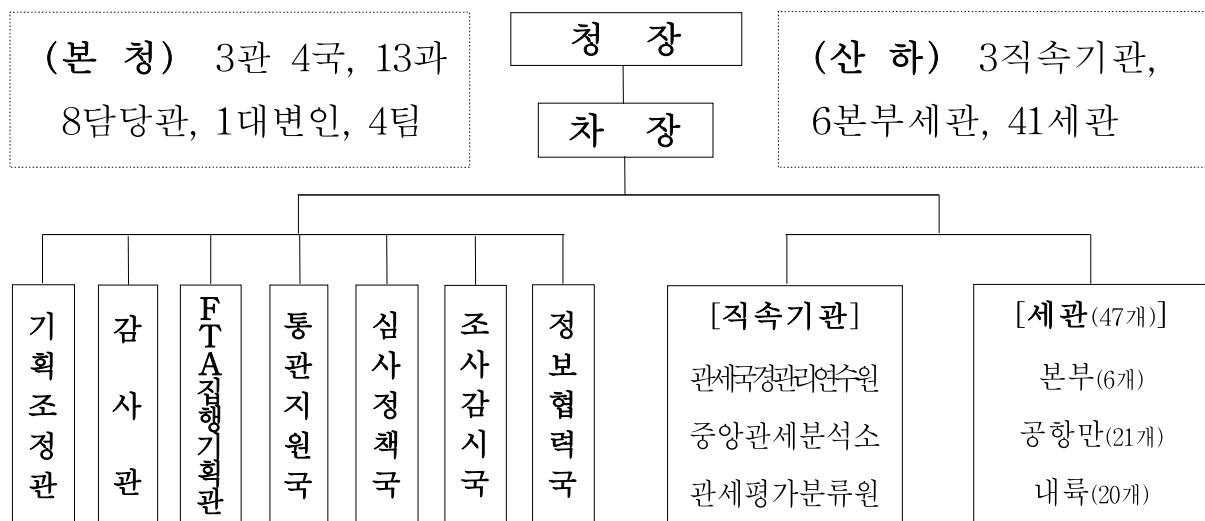
1 개 청 : 1970. 8월,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

2 주 요 기 능

- ① 국가 재정수입 확보 ② 수출입 · 여행자 통관
③ 불법 · 부정 무역 및 외환거래 차단 ④ FTA 이행 및 활용 제고

- (통관지원국) 수출입 물류촉진 및 통관적법성 확인, 여행자 통관
- (심사정책국) 국가재정수입 확보, 관세포탈 심사, 성실납세환경 구축
- (조사감시국) 밀수·불공정무역·불법 외환거래·총기·마약 등 단속
- (정보협력국)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개발·운영, 관세외교 추진
- (FTA집행기획관) 국내외 FTA 이행 점검, 기업 FTA 활용 지원

3 조 직



본부세관(6)	서울 · 인천공항 · 부산 · 인천 · 대구 · 광주
공항만 세관(21)	평택 · 속초 · 청주 · 김포 · 인천공항국제우편 · 김해 · 거제 · 마산 · 포항 · 울산 · 광양 · 목포 · 여수 · 군산 · 제주 · 동해 · 대산 · 고성 · 사천 · 부산국제우편 · 통영
내륙지 세관(20)	안양 · 대전 · 천안 · 용당 · 양산 · 창원 · 수원 · 안산 · 구미 · 구로 · 성남 · 의정부 · 충주 · 파주 · 원주 · 사상 · 진주 · 부평 · 익산 · 전주

4 정 원

(’14.1월말 기준)

구 분	계	본 청	본부세관	세 관	직속기관
계	4,570	331	2,729	1,373	137
5급 이상	362	115	132	96	19
6급 이하	4,208	216	2,597	1,277	118

* (성비) 남성 68.1%, 여성 31.9%

5 2014년 세출예산 : 4,826억원*

인 건 비	기본경비	사업비
2,625억원 (54.4%)	276억원 (5.7%)	1,924억 (39.9%)

* ’13 세출예산 4,546억원 대비 6.1% 증가한 수준

6 2014년 징세목표 : 68.1조원* (總 국세 216.5조원 중 31.5%)

관 세	수입부가세	기타 내국세**
10.6조원 (15.5%)	51.3조원 (75.4%)	6.2조원 (9.1%)

* ’13 실적(65.5조원) 대비 4.0% 증가한 수준

**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



Ⅱ. 2013년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

1

2013년 주요 정책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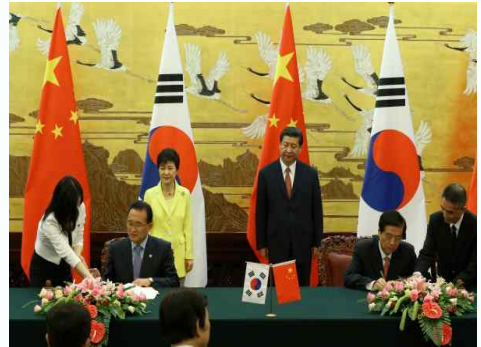
① 무역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 조성

- 한·중 정상 임석하에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(AEO MRA)을 체결*('13.6월)하여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**

* [AEO MRA 7개국 체결 : 세계1위] 중국·일본
· 뉴질랜드·미국·캐나다·싱가포르·홍콩

** [KIEP 전망] 2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

[중국과 AEO MRA 체결('13.6월)]



- 전국 세관에 「FTA 원스톱 지원센터」를 설치하는 등 FTA 지원*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FTA활용을 통한 신규 수출 시장 창출 및 원자재의 원활한 해외조달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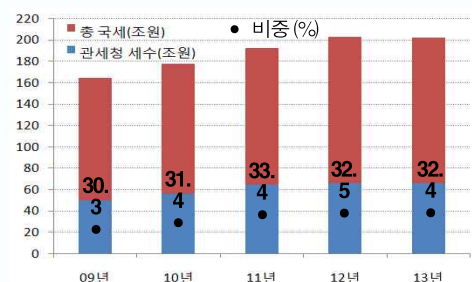
* 1:1 맞춤형 원산지검증 컨설팅, 간편 원산지 판정 시스템(FTA-PASS) 보급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율 대폭 제고 ⇨ 한·미 76.1%, 한·EU 80.8%, 한·EFTA 80.0%

②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적 뒷받침

-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수확보*에 주력

* 65.5조원(전체 국세 201.9조원 중 32.4%) 재정조달

[최근 5년간 관세청 세수 비중]



- 관세행정 기능·인력을 재배치*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하여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양성화 목표액 성공적 달성**

* 지하경제양성화 추진단 운영(총 92팀 457명 : 기존 41팀 223명 + 추가 51팀 234명)

** 1조4백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목표액(7천6백억원) 對比 36.8% 초과 달성

③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

- 중소기업 대상으로 성실무역업체 (AEO)지정* 및 면세산업 진입 확대**

* [중소중견 성실무역업체] ('12)14개 ⇨ ('13)35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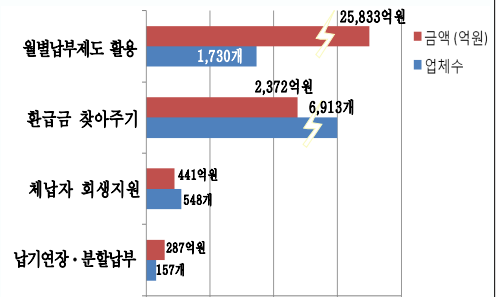
** [중소중견 면세점] ('12)3개 ⇨ ('13)12개

- 중소기업 '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', 납기연장·분납 등 세정지원 강화

-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한편,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FTA 컨설팅 서비스* 제공

* 중소기업의 FTA 활용단계에 따라 스스로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원

[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]



④ 수입물품 가격인하 및 소비자 보호

- 병행수입물품 세관인증제를 확대하고 수입가격 공개품목을 생활 밀접품목* 위주로 추가하는 등 수입물품 가격경쟁 촉진

* 할당관세품목·농수축산물 등 60개 품목 매월 1회, 생필품 13회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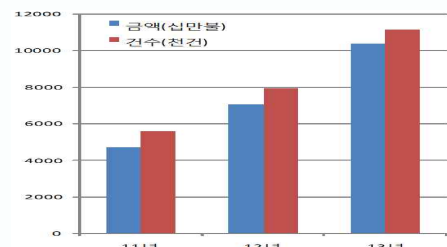
- 원산지둔갑 우려물품의 유통이력*을 추적하고 위조상품의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유통질서 확립

* [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] ('12)22개 → ('13)29개

⑤ 개인소비물품에 대한 통관체제 혁신

-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접 구매 급증에 따라 전담인력 확충, 첨단 검사장비, 전용검사장 설치 등을 통해 신속·안전한 통관 적극 지원

[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추이]



- 인천공항에 신용카드 무인세금수납기 설치 및 '내국세 환급 (Tax Refund) 절차' 개선* 등 내·외국 여행자 편의 증진

* 1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건에 대해 세관방문 없이 공항에서 즉시 환급 받도록 세관절차 생략

6 국민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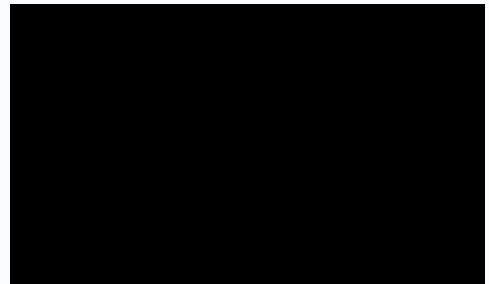
- 전국세관에 「수입식품안전대책단」을 발족하여 방사능 오염 물품 등 외국 불량먹거리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*

* ['13 불법·불량먹거리 적발실적] 517건 · 3,616억원 (전년 건수대비 13.6% 증가)

- ‘마약류 우범화물 선별시스템’ 구축 및 X-ray 검색기 등 첨단 장비 확충을 통해 총기·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방지*

* 최근 10년 이래 최대 규모의 마약단속 실적 달성 (전년대비 46% 증가한 930억원 적발)

[마약류 단속 실적]



7 불법·부정무역 및 국부유출 차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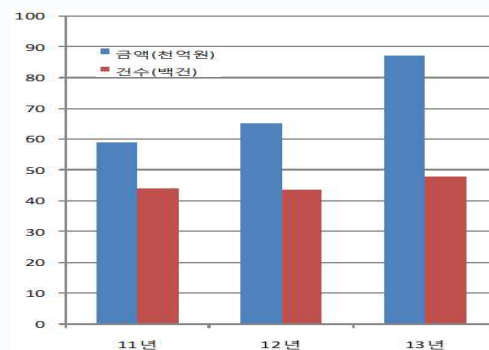
- 금괴 밀수 등 무역거래를 악용한 조직적·지능적 불법행위* 차단

* 금괴 359kg(시가185억원) 등 총 1,714억원 적발

- 조세회피처*를 악용한 재산도피·자금세탁 등 중대외환 범죄 적발

* 159건, 1조2천억원 (전년대비 건수 96.3%, 금액 36.8% 증가)

[최근 3년 조사단속 실적]



8 국익제고를 위한 세일즈 관세외교 전개

-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을 중남미 등 신흥개도국에 수출*하여 시장 선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* ('05~'13) 에콰도르 등 8개국, 약 1억불 전자통관시스템 수출(1,460명의 일자리 창출)

- 중국·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기업의 통관애로를 관세관·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*하는 등 통관장벽 완화

* (예) 한·중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L社의 미환급금(1,800억)이 즉시 환급되도록 조치하는 등 통관애로 208건 해소, 기업비용 2,145억 절감

- WTO 무역협정에 통관단일창구, 통관시간 측정시스템 등 우리 관세제도를 반영함으로써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선도

9 부처간 칸막이 제거로 정부3.0 선도

- 국세청 · 금융감독원 · 금융정보분석원 (FIU)과의 과세자료 ·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외환거래 · 탈세 단속 성과* 극대화

* 역외탈세 혐의정보 · 과세 기초정보 등 1,430만건 확대 ⇨ 1,300억원의 세수 추가 확보

[정부 3.0 BP 경진대회 大賞 수상]



- 복지부 · 방위사업청 · 조달청 등과 통관 · 보조금 정보 공유를 통해 ‘정부보조금 부정수급’ 단속*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

* [예] 복지용구 · 치료재료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부담편취 608억원 적발

2 평 가

- ◆ 새 정부 출범 1년차인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지원 ·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 및 거시경제정책을 관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

- 세계은행(World Bank) 통관환경 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('13.9월)
- 국제공항협회(ACI) 국제공항 세관 만족도 평가 9년 연속 세계 1위('14.1월)
- 정부 3.0 BP 경진대회 大賞('13.12월)
- 국가통계발전 유공 대통령상('13.9월)

- ◆ 박근혜정부 二年次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부 핵심정책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더불어,

-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성과 창출에 보다 주력할 필요



Ⅲ. 2014년 정책추진 여건 및 방향

- 1. 정책추진 여건**
- 2. 정책추진 방향**

1

정책추진 여건

① 대외 경제전망

- 세계 경제는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*를 보이고 있으나 美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

* 세계 GDP성장률 전망(IMF) : ('13) 2.9% ⇨ ('14) 3.6%

- 전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라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지역간 경제블록화* 및 비관세 장벽은 강화되는 추세

* 미-EU FTA(TTIP), 미국 주도 TPP, 중국 주도 RCEP, 일-EU EPA 등

② 국내 경제전망

- 우리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부채·내수 부진 등의 위험요인으로 성장세*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

* 한국 GDP성장률 전망(IMF) : ('13) 2.7% ⇨ ('14) 3.7%

- 세계경제 회복세, 교역량 증가*로 세수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 예상

* 한국 수출입 증가율 전망(기획재정부) : (수입) 9.0%, (수출) 6.4%

③ 국민건강·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상존

- 불량 먹거리 등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아시안 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관심 증가

④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무역시대의 본격 도래

- 인터넷·스마트폰을 활용한 국가간 전자상거래 등의 급증에 따라 자가소비 목적의 개인무역과 관세행정간 밀접성 증대

추진 방향

새 정부 2年次를 맞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견인

- 수출증대가 내수·일자리 창출로 확산되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
-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대응하여 엄정한 세수관리와 철저한 세원발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
- 비정상적인 불법·부정무역을 정상화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켜내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무역질서 확립

중점 추진과제

-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
-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
-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
- 불법·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
-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
-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
-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



IV.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1.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**
- 2.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**
- 3.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**
- 4. 불법·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**
- 5.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**
- 6.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**
- 7.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**

◇ 창조경제를 기초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

[1] 이행 계획

□ 소방위 수출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

- FTA가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수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제 운영
- AEO MRA(상호인정협약)를 주요 교역국 중심으로 확대·체결*하여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
 - * 멕시코·인도·터키 등 교역규모가 크고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 우선 체결 추진
- 농수산물식품 단지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·보관·수출이 가능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 농어업의 수출기반 조성

□ 新물류 부가가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

- 보세·물류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*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 등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도록 지원
 - *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,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제품 보세운송절차 마련 등
-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물품을 국내 환적을 통해 저비용의 국제 우편운송(EMS)으로 재배송*함으로써 외국 특송물류 유치
 - * [현행] 미국(특송) ⇨ 중국 [향후] 미국(특송) ⇨ 한국(EMS 배송) ⇨ 중국
- 화물의 단순 보관에 국한된 보세창고의 기능을 확대하여 분리·병합·재포장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토록 개선

□ 强小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- AEO 공인에 필요한 심사절차 간소화, 자금지원 등을 추진하여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 확대*

* [중소수출기업 공인획득 지원업체 수] 16개('12) ⇨ 23개('13) ⇨ 65개('14)

- 기업이 작성한 FTA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 완화*

* 원산지확인서 제3자 사전확인제도,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등

- 중소기업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품목 확대, 관세납부 복합결제(현금+카드) 도입* 등으로 기업 자금부담 경감

* 복합결제 기능 제공 ⇨ 카드납부분에 대해 결제시점까지 징수유예 효과 발생

(2) 기대 효과

- FTA 활용, AEO MRA 확대, 농수산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한 관세행정상 총력지원으로 수출증대 및 경제 활성화 촉진

- 동북아 거대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新물류 프로세스의 결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* 및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 지원

*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 도입 ⇨ 일자리 300명, 부가가치 연간 129억원 창출

* 외국 특송물류의 국내환적 유치 ⇨ 일자리 1,000명, 부가가치 연간 3,600억원 창출

- 특히, 국내 석유제품 탱크터미널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정유사의 수출 증대로 동북아 오일허브의 조기 실현 지원*

* (석유제품 수출증가 전망) 연간 5,300억원, (탱크터미널 연간 수익증가 전망) 연간 300억원

- 인적·물적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확대를 통해 强小기업으로 성장

◇ 불합리한 납세관행의 정상화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여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과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

(1) 이행 계획

□ 2014년 세수목표 달성

- 증가하는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세수목표(68.1조원*)를 차질없이 징수

* 전체 국세 216.5조원의 31.5% 수준

- 세수관리 점검단을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*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

* [기존] 본부세관(6개) 단위 ⇨ [확대] 전국세관(47개) 단위

□ 과세 정상화를 위한 조직역량 결집

- 고세율 품목, 농수축산물, 과다환급 우려업종,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집중*

* [관세조사 인력확충 계획] 47명('14) ⇨ 56명('15) ⇨ 56명('16) ⇨ 57명('17)

- FIU 자료·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금융정보*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·분석하여 지능적 조세탈루 차단

* 관세법칙사건·관세탈루 조사·관세체납 징수관련 FIU자료, 분기별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

- FTA 특혜를 악용한 원산지 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*

* 효과적인 FTA 원산지검증을 위한 업체별 검증 도입 및 기획 검증 실시 등

□ 세입 확보를 위한 과세 인프라 확충

- 국세청(국세)·안행부(지방세)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과세정보 공유를 위해 부처간 과세정보시스템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*
* (현행) 지방세 환급자료 등 4종 ⇨ (확대)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10종 실시간 연계
-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도입, 수입자에 대한 입증 책임 강화, 국세청과 합동 체납정리* 등 조세채권 관리 강화
* (예) 부산세관·부산국세청간 체납 공동정리 시범사업 추진中
-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로펌 등의 공격적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쟁송수행 체계 개편*
* 쟁송조직 확대(송무센터 신설), 본청 소송전담 주요사건 범위 확대(50억⇨10억) 등

(2) 기대 효과

- 증가하는 복지재정 등 국가재정 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가 주요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
- 엄정한 기업심사를 통한 조세탈루 차단 및 체납관리 등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

[향후 4년간 추가세수 확보계획]

연 도	'14	'15	'16	'17	합계
금액(조원)	1.34	1.40	1.43	1.48	5.65

※ ('13) 1조 4백억원 추가세수 확보('13 목표 7,600억원 대비 36.8% 초과 달성)

- 세율체계 개편없이 시스템·제도 등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효율적으로 확보

◇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대응한 효과적인 통관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“무역 2조달러 · 수출 5대 강국” 진입을 조기에 실현

[1] 이행 계획

□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 통관환경 조성

- 기업 · 개인의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태블릿 PC 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*
* ('14) 모바일 통관시스템 구축 ⇨ ('15)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 등
- 세관신고 즉시 통관이 완료되는 전자통관심사 수혜업체와 모든 수출입 업무를 원스톱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의 연계기관 확대*
* (현행) 38개 기관 ⇨ (향후) 점진적으로 연계기관 확대
- 각 부처에서 요청한 통관 규제 사항(5,518개 품목)을 전면 재검토하고 동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일몰제 도입*
*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재정비(수출입요건을 규제하는 14개 기관과 우선 협의)

□ 신속 · 안전한 수출입통관 관리체제 구축

- 선사 · 항공사가 제출한 화물정보와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화물정보를 대사*하여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는 통합검사체제 구축
* 입항시 제출정보(적하목록 17개 항목)와 수입신고시 제출정보(69개 항목) 통합 분석
- 도난차량 밀수출 등 간소화된 수출절차*를 악용한 불법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 선적시점(출항 前)에서의 수출검사 강화
* 수출품 보세구역장치 의무('94) 및 보세운송의무 폐지('96), 수출신고 자동수리(94%)
- ‘과거 적발이력’ 중심의 세관 검사대상 선별체계를 ‘실시간 위험정보’ 기반으로 전환하여 세관검사의 실효성 제고

□ 새로운 무역형태에 대응한 통관체제 정비

-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소비물품 반입 급증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제도를 개편*하고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
* (일반수출·간이수출 단점보완) 신고항목 간소화, 무역통계 관리 및 환급 지원
- 허위 주소지 제출 및 분산반입을 통한 면세제도 악용사례*를 방지하기 위해 특송화물의 실제 배송지정보 제출 의무화
* (최근 5년간 특송물품 부당 감면) 1,446억 상당(연간 251억 상당의 세금탈루)
- 수입우편물 사전정보 교환국가를 미국에서 중국·일본까지 확대하고 특송·우편물 통합위험관리 체계 마련

(2) 기대 효과

- 모바일 통관서비스 구현*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출입이 가능한 선진 통관환경을 조성하여 세관절차상의 불편을 대폭 완화
* 5 Any 통관서비스 (Anytime, Anywhere, Anynetwork, Anydevice, Anyservice)
- 성실무역업체(AEO)에 대해서는 24시간 365일 더욱 간편한 통관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수출입경쟁력 및 성실도 제고*
* 성실기업 우대, 불성실기업 관리강화 등 「Two-track 통관서비스」로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등 성실도 제고를 위한 유인 제공
- 전자상거래 등 新무역형태에 대응한 수출입 체제의 구축으로 개인무역 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및 소비자 효용 증대*
* 개인무역과 일반무역간 경쟁을 통해 수입물가 하락 및 소비 선택폭 확대
- 효과적 검사체제 구축을 통해 최초 통관단계에서 불법물품 적발로 시중유통 차단 등 단속효과 제고 및 국가비용 절감

◇ 비정상적인 불법·부정무역의 엄정한 단속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“공정한 대외거래 질서” 확립

[1] 이행 계획

□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통한 국부유출 차단

- 최근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외환시장 불안을 틈탄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별 수출입·외환거래 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

- 확대되는 FIU 정보*를 활용한 전략적 분석**을 통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·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

* 범칙조사 목적 ⇨ 범칙조사 + 관세탈루 + 체납징수 목적까지 확대

** FIU가 제공하는 혐의정보·고액현금거래정보 집중 분석팀 운영

- 비자금조성·공공재원 부정수령 등 부당이득 목적의 국제무역 거래 가격조작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*

* 군납사기·의약품 리베이트·장애인보장구·복지용구·치료재 등 취약분야 발굴

□ 정상무역을 가장한 불법·부정행위 단속 강화

- 고세율품목, 위조상품에 대한 컨테이너 밀수 등 한탕주의식 조직형·기업형 무역범죄 엄단*

* 고위험품목 조직밀수 전담팀 운영,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상시동향 파악 등

- 계절에 따른 수요증가, 국내외 가격변화 등에 대한 시중동향 분석을 통해 밀수위험이 높아진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실시

- 개별사건 간의 연관성 분석기법*을 활용하여 지능적인 대규모 조직밀수 사범의 배후까지 추적·단속

* 사건별 밀수입자·해외 공급처·밀수경로 등의 유사점 추출 분석

□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

- 경찰청·식약처·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 네트워크 강화 및 공조수사 활성화*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

* (경찰청) 중고차, (식약처) 불량먹거리, (해수부) 해상면세유 등

- 미국·중국·일본·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사당국과 실시간 밀수정보 교환 및 공조수사로 해외공급망까지 발본색원

(2) 기대 효과

- 국외재산도피·자금세탁* 등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여 외환수사 전문기관으로서 역량 축적 및 외환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보

* ('13) 재산도피·자금세탁 검거실적 : 90건, 5,066억 (전년대비 금액기준 135% 증)

- 특히, 무역거래를 악용한 복지재원 부당수령 등 공공재원 편취행위를 근절하여 국가재정의 누수(漏水) 방지

- 밀수 등 불법·부정무역 척결을 통한 대외거래질서 확립*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지원

* 한국의 법질서 수준(6점 만점에 4.4점)이 OECD 평균(5.5점)에 도달시 연평균 1%p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 <한국개발연구원>

-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·공조수사 확대로 불법·부정무역의 시작점과 종점에 대한 근원적 차단효과 제고

◇ 국민건강·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하여 국민생활 보호에 기여

[1] 이행 계획

□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효과적 차단

- 방사능 오염 물품·외국산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율 상향 조정* 등 통관관리 강화

* [검사율] 일반 수입물품 2~3%, 중점감시 수입식품 11~14%

- 용도전환(비식용⇨식용)·국산둔갑 우려식품 등 사회적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긴급지정제 도입 등 유통이력 관리제도 개선*

* 유통이력물품 표시제(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식품위생법의 한글표시제와 연계) 등 도입

- 마약류의 주요 공급루트별로 조사대상을 선별*하고 아·태 지역 국가들과 국제합동 단속 등을 추진

* ['13 루트별 적발비율(건수기준)] 국제우편 55%, 특송 24%, 여행자 19%, 기타 2%

□ 민생안정을 위한 수입물품의 효과적 관리

- 통상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적고 생활필수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 확대*

* ① 공산품을 가격공개 대상에 포함 ② 4분위 평균가격 공개 ③ 60 ⇨ 100개로 품목 확대(∼'16)

- 물가안정과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업체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 지속 추진*

* 통관표지(QR코드) 부착대상 상표 확대, 주요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 마련 등

□ 사회안전을 위한 공항만 감시체제 확립

-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테러방지 등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·시행*
* 인력·장비 재배치 및 대회기간 24시간 비상근무, 본청 및 세관 전담조직 운영 등
- 3D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류 등 신종 무기류의 반입차단을 위해 여행자·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경로별 정보분석 및 단속 강화
- 관세청 통합항만감시시스템(IN-POSS)과 해경청 해양경비 안전망*의 연계 등 항만 감시·단속 인프라의 지속적 효율화
* 전국 76,000척 어선의 위치·항적 등을 전자해도 상에 표시

[2] 기대 효과

- 불법 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·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기여
- 특히, 관세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*을 통해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이미지 제고

* '13 마약류 단속실적 : 46,429g (시가 930억원), 전년대비 금액기준 46% 증

☞ '13 마약류 단속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(한국재정학회, 국민보험건강공단)

$$1,859\text{억원} = \frac{46,429\text{그램}}{2\text{그램 (1인마약중독량)}} \times 801\text{만원 (중독자치료비용)}$$

- 수입 생필품 등의 가격공개,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*하여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
*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Gap 공개로 유통과정에서 불합리한 폭리행위 억제 효과
- 공항만 감시체제 효율화를 통한 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으로 국제경기의 성공 개최 등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

◇ 성과중심의 관세외교활동 전개로 우리기업에게 우호적 무역환경을 조성하고, 개도국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관세행정 리더로 도약

[1] 이행 계획

□ 우리 수출기업의 新시장 진출 지원

- BRICs · ASEAN 등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 회의를 활성화*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

* ('14 개최 예정) 홍콩, 니카라과, 라오스, 스페인, 멕시코, 베트남 등 15개국

- 첨단 IT제품 등 수출 주력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WTO 정보기술협정(ITA) 개정*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

* 현재 250개 품목 개정협상 中(관세청 제안 품목 : 모니터류 · 반도체장비 · LED 등 13개)

- 인터넷 해외 통관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에 관세관 파견 등*을 통해 현지 통관애로 해소

* (現) 6개국 · 9명 ⇨ 통관애로 다발국 인니 · 브라질 · 인도 등 관세관 파견 추진 中

□ 개도국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 확대

- 국내외 개발원조 자금(KOICA 자금, 세계은행 기금 등)을 활용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의 해외 보급 확대*

* ('05~'13) 8개국 · 1억 148만불 ⇨ ('14~'16) 7개국 · 1억 4,700만불

- 세관협력기금*(CCF-Korea)을 활용하여 남미, 아프리카 등 전략적 지원국가에 대한 한국형 AEO 제도 확산

* ('11~'13) 10.7억원 지원 ⇨ ('14~) 15.7억원으로 증액

- 대륙별 거점국가 중심으로 '개도국 능력배양사업'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제도를 개도국에 지속 전파

□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 선도

- APEC 물류비용 절감계획, ASEM 무역원활화 실천계획 등
세관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통관절차 표준화에 적극 기여*

* (ASEM) 무역원활화 실현을 위한 통합국경관리(관세청) 분야 간사국 수행 등

- WCO 및 FTA 체결국과의 원산지 협력강화, 국제 원산지
컨퍼런스 정례화 등을 통해 원산지제도 통일화 논의를 선도*

* WCO 원산지 증명절차 마련을 위한 자문단 그룹(6개국) 참여

- 위험관리·원산지 등 주요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국제훈련을
강화하여 국제 관세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*

* (現) WCO 인증교관 7명 ⇨ ('14 계획) 통관단일창구 등 WCO 인증 전문가 2명 배출

[2] 기대 효과

- 관세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직접·즉시
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 촉진

- WCO HS 위원회, ITA(정보기술협정)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
참여하여 수출 주력상품의 국제 품목분류 분쟁을 사전 차단

[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기업 비용 절감]

연 도	'11	'12	'13*	'14~
금 액 (억원)	892	936	2,145	'14 이후 매년 최소 1,000억원 이상

* ('13) 중국 관세청의 1,800억원 세금 환급조치로 인한 실적 포함

- 개도국 지원 및 협력을 통한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으로
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출 협력 교두보 마련 및 시장선점 효과

-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
IT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*

* ('05~'13) UNI-PASS수출을 통해 1,46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거양

◇ 중장기적인 視界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는 등 미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착실하게 조성

[1] 이행 계획

□ 정부 3.0 기반 對고객 서비스 혁신

- 선제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개별 정보수요를 파악해 영업비밀·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관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개방 추진*
*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관세행정 DB 92개 등 '17 까지 147개 개방 추진
- 선도적으로 국세청·금융위·복지부 등과 과세·수사정보 공유 확대* 및 공조수사·합동단속을 통한 부처간 협력 강화
* '관세행정 정보 개방·공유·소통·협력 종합대책' 마련·시행
- 국민 중심·국민 우선의 관세행정을 위해 對국민 홍보 및 소통채널 구축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

□ 청렴문화 확립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

- 청렴교육*·청렴서약제 시행을 통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세관별로 청렴도를 평가·개선하는 등 자율정화체계 마련
*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, on-off Line을 통한 쏜직원 반부패·공직윤리 교육 상시화 등
- 취약분야·시기·인물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無관용 원칙 견지
- 복지부동 등 비정상적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일상화하고 성실히 일하는 직원을 발굴·포상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확산

□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의 효율적 토대 마련

- 국가 무역·물류의 핵심 인프라인 「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」을 차질없이 구축*하여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

* 분석·설계('13) ⇨ 시스템 구축('14) ⇨ 테스트·전환('15) ⇨ 개통('16)

-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에 대해 규제혁신을 추진*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

* '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(기업 관계자·규제 전문가 등)' 구성·운영('14.3월)

- 미래 관세행정의 비전을 담은 「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조직성장 유도

(2) 기대 효과

- 정부3.0 혁신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부처간 칸막이 제거*로 對정부 국민만족도 증진 및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

* 관세청의 선도적 정부3.0 실현으로 타부처 파급효과 유도

- 비리 척결(Zero-corruption)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획득하고 정책의 수용도 제고*

* 6대 중대비리(금품향응수수·횡령·음주운전·성범죄·정보유출·밀수관여) 발생 제로화 추진

- IT 인프라 확충 및 업무 프로세스의 전면 개편 등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으로 기업 물류비용 절감*

* 4세대 국종망 구축시 기업물류비용 절감액 : ('16) 800억 ⇨ ('17 이후) 820억

-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



V. 분기별 추진 계획

1.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

	실천 과제	실천일정
1/4 분기	▪ 맞춤형 컨설팅지원 세부 시행계획 수립	2월
	▪ FTA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전국 확대시행	2월
	▪ 한-홍콩 AEO MRA 체결	2월
	▪ 관세청-우정사업본부 간 MOU 체결	2월
	▪ 동북아오일허브 관세행정 지원 T/F 구성·운영	3월
	▪ 한-멕시코 AEO MRA 서명	3월
2/4 분기	▪ 선진 오일허브지역(싱가포르, 일본) 현황조사	5월
3/4 분기	▪ 관세납부 복합결제(현금+카드) 제도 도입	7월
	▪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	8월
	▪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신설	9월
4/4 분기	▪ 한-터키 AEO MRA 체결	12월

2.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

	실천 과제	실천일정
연중	▪ 다국적기업 FTA 특혜무역 모니터링 및 검증	연중
	▪ 세수점검 : 세수동향(매일), 세수분석(매월), 전국 세관장 점검회의(분기)	연중
1/4 분기	▪ 과세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계획 수립	1월
	▪ '14 원산지 기획검증 기본계획 수립	2월
	▪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보분석	2월
	▪ 분청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·개편	2월
2/4 분기	▪ 하반기 정기법인심사대상 선정	5월
	▪ 납세자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관세법(영) 개정안 기재부 제출	5월
3/4 분기	▪ 환급정보 실시간 교환	9월

3. 무역 2조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선진통관체제 구축

	실천 과제	실천일정
연중	▪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교환 국가 확대	연중
1/4 분기	▪ EDA 우범 기준 개발	2월
	▪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체계 개편	3월
	▪ 배송결과정보 확인시스템 구축	3월
	▪ 통합 검사방안 기본계획 수립	3월
2/4 분기	▪ 수출입 규제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	4월
	▪ 국제우편물 C/S 운영방안 마련	6월
	▪ 모바일 통관체제 분석 및 설계	6월
3/4 분기	▪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전면 재검토 및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	7월

4. 불법·부정무역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

	실천 과제	실천일정
연중	▪ 「부정식품사범 단속 특사경 협의체」 정보교류	연중
1/4 분기	▪ 서울시·농진청·검찰과 위해식품 공조수사	2월
	▪ 일본·홍콩세관과 금괴 밀수조직 공조수사	2월
	▪ 설·대보름 밀수 및 원산지위반 특별 단속	2~3월
2/4 분기	▪ 조세회피처로의 외환반출 정보분석	5월
	▪ 고위험물품 조직밀수 전담팀 지정 운영	5월
	▪ FIU 정보의 전략분석 계획 마련	6월
3/4 분기	▪ 추석 명절 밀수 및 원산지위반 특별단속	8월
	▪ 관리대상화물 검사비율 상향 및 일제검사	9월

5.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

	실천 과제	실천일정
연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D프린터 총기 등을 활용한 대테러 모의훈련 	연중
1/4 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테러 관세국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	1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X-Ray 판독요원 교육계획 수립 	3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 완화 	3월
2/4 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입가격 추가 공개품목 정기공개 	4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안전 및 통관지원 대책 수립 	6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병행수입 가이드라인 제작·보급 	6월
3/4 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상거래 주요 수입품목 현황 등 분석·공표 	8월
4/4 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양경비안전망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	12월

6. 국익제고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

	실천 과제	실천일정
연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세관 증원 관계부처(외교부·안행부 등) 협의 	연중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세청장회의 개최 	연중
2/4 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 추진 	4~12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남아프리카 지역 관세청장회의 개최 지원 	5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	5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제원산지 컨퍼런스 개최 	6월
3/4 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계은행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협력 MOU 체결 	9월
4/4 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바일 해외통관지원센터 시범 운영 	11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라오스, 인도 등과 원산지 협력 MOU 체결 	11월

7. 미래대비 관세행정 역량 강화

	실천 과제	실천일정
연중	▪ 제4세대 국종망시스템 개발	연중
	▪ 전 직원 반부패·공직윤리 교육 실시	연중
1/4 분기	▪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구성	2월
	▪ 관세청 미래발전 전략 마련	2월
	▪ 청렴실천선언식 개최	3월
2/4 분기	▪ 우리청 등록규제별 비용분석 및 타당성 검토	4월
	▪ 4세대 국종망 2단계 구축전략 수립	5월
	▪ 선거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	5~6월
3/4 분기	▪ 세관별·업무별 자체 청렴도 평가	7월
	▪ 고시·훈령 정비	10월
4/4 분기	▪ 통관단일창구 구축기관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	11월